빨간줄 안남는 문제아 선도 '통고제도' 아시나요

검·경 등 수사기관 대신 법원이 직접 개입해 문제 해결

전과·수사기록 남지 않아 광주 5년새 이용 4.6배 급증

#1. 중학생 아들을 둔 A씨는 자꾸 엇나가는 아들에게 정신 차리라며 손찌검을 했다. 아들은 강하게 반항을 했고, 되레 자신을 폭행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A씨는 아들 훈육을 포기했고,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고 법원은 통고를 권했다. 아버지의 통고로 법정에 선 아들은 소년원에 4주간 격리돼 상담과 교육을 받았다. 부모도 법원에서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 중학생 B군은 툭하면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켰다.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들을 때리고, 심지어 교사에게 욕설은 물론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학교 측은 B군을 수차례 징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학교는 어쩔 수 없이 B군을 법원에 통고했다.

부모나 학교장이 문제를 일으킨 자녀나 학생의 처벌을 법원에 요구하는 통고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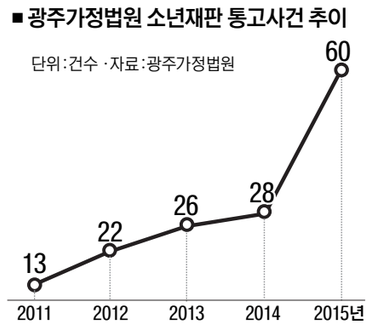
지난 31일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에 통고로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2011년 13건에서 2012년 22건, 2013년 26건, 2014년 28건, 지난해 60건으로 집계됐다. 5년 사이에 4.6배 급증한 것이다.

통고는 가정과 학교 등에서 청소년의 비행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명 '전과'라고 불리는 범죄경력이나 수사기록은 남지 않아 성인이 돼서 전과기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또 비행 초기 단계에 법원이 적절하게 개입함으로써 비행의 장기화나 무거운 비행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전문가 진단·심리상담·화해권고제도 등 법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후견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통고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다.

■ 광주가정법원 소년재판 통고사건 추이



특히 2012년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급증하고 있다.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되자, 학생을 통제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통고제도가 한몫 했다.

실제 지난해 통고사건을 대상별로 보면, 총 60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장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학교장이 20건, 보호자가 14건이었다. 학교장의 경우 전년도 9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11건이나 급증했다.

황진희 광주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비행청소년이 수사기관을 거치게 되면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고의 장점은 법원이 직접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판사는 이어 "학교와 가정에서 통제되지 않는 학생의 문제를 법원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통고의 기본 취지"라며 "더 큰 일탈을 막으려면 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고는 광주가정법원에 방문하거나 전화(062-608-1255) 또는 우편접수(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85 광주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접수담당자 앞)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소년사건 통고제도

소년법상의 통고제도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학교폭력, 기타 비행 혹은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범한 경우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직접 법원에 접수,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청소년에게는 범죄경력이나 수사기록이 남지 않아 성인이 돼서도 전과기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폭설 뒤 곳곳 '도로위 지뢰' 포트홀…아찔 운전 피해 속출

눈 녹으며 우후죽순 생겨

호남고속도에만 수백여개

차량 40여대 펑크 등 고장

폭설이 내린 뒤 광주·전남지역의 많은 도로에서 포트 홀이 발생했다. 아스팔트 표면이 깨져 생긴 웅덩이인 포트 홀은 폭우나 폭설 뒤에 발생 빈도가 높다. 사진은 남구 백운동의 한 도로.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난 31일 오전 광주시 북구 동운고가 아래 도로에선 아찔한 '곡예운전'이 펼쳐졌다.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 홀'(pothole·도로 표면이 움푹 패인 곳)을 급히 피하려고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바삐 움직이면서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깊이가 최대 10㎝에 이르고 너비도 축구공보다 큰 포트홀 10여개가 잇따라 펼쳐진 이곳에선 덜컹거리는 차량 충격음이 연달아 들려왔다.

기록적인 폭설이 지난 후 쏟아져나온 포트홀이 제때 복구되지 못하면서 도로 곳곳에서 아찔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폭설이 그친 지난 27일부터 4일간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응급복구반을 투입해 상무대로 등 16개 노선에서 발생한 포트홀 1369개를 긴급보수했다.

하지만, 포트홀이 워낙 광범위하게 발생한데다 이미 복구한 곳도 다시 파손되기를 반복하면서 곳곳엔 여전히 포트홀이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다.

실제 이날 둘러본 결과 북구 운암동 동운고가 아래 도로, 남구 백운고가 주변, 서구 양동시장에서 시내방향 구간에선 깊이가 최대 10㎝를 넘어서고 너비도 30㎝에 이르는 포트홀 수십여개가 남아있었다. 포트홀이 대체로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도로 부분에서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은 이를 피하려 차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관찰됐다.

고속도로에서도 포트홀 수백개가 발생하면서 이 구간을 달리던 차량 수십대가 파손됐다. 지난 29일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 승주나들목과 서순천나들목 사이에서는 지름 30~50㎝, 깊이 3~7㎝ 크기의 포트홀이 280여개가 발생해 차량 40여대가 타이어 펑크 또는 조명 등이 고장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폭설이 그친 후 고서분기점에서 서순천까지 970여개의 포트홀이 발생해 차량 고장으로 연결됐지만 현재는 모든 구간이 복구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에 도심 도로에서 포트홀이 무더기로 발생한 것은 폭설과 관련이 깊다. 눈이 녹으면서 생긴 수분이 아스팔트에 스며들어 얼어붙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약해진 도로 표면 위에 차량 통행 압력이 더해지면서 우후죽순 생겨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포트홀이 타이어 등 차량을 파손시키는 주요 원인이자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차량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속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폭설이 그친 후 응급복구반을 편성, 도로 보수에 나섰지만 도로가 얼어붙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손 본 곳이 또다시 파손되는 경우도 생겨나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포트홀에 차량 훼손 보상, 국가배상심의회에 신청해야

도로에 생긴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 펑크 등 차량 고장이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과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포트홀 때문에 차량이 훼손됐다면 운전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포트홀 등 도로 관리 소홀에 따른 차량 피해가 발생한 운전자의 경우 광주고등검찰청 홈페이지에 나온 '국가배상 신청 안내문'을 참조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운전자 본인이 사고 개요, 피해액 등을 적고 관련 증거물을 첨부한 뒤 신청하면 광주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해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이 결정된다.

광주시청에는 최근 폭설 이후 타이어 펑크 등 150여건의 차량 파손 피해가 접수됐다.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측이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관계자는 "현재 40여건의 차량 파손 신고가 접수됐다. 고속도로 관리 소홀과 차량 고장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월요일부터 운전자와의 피해보상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바로잡습니다=광주일보 1월28일자 6면 '보성·장흥·고흥군수 3명의 운명은?' 기사 내용 중 이용부 보성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는 부분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1심서 집유 2년 선고

추징금 3000만원도…항소 밝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난 29일 "성완종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인터뷰 내용과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이 부합한다"며 이 전 총리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완종의 진술 내용이나 그 녹취 과정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19년만에 바뀐 진범…'이태원 살인' 패터슨 징역 20년

22세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씨를 별다른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29일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장실벽에 묻은 혈흔을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량 피가 묻었을 것"이라며 "당시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피가 적은 양만 물방울 형태로 묻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홍익대생 조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의 범행이 확실하지만 검찰이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한 리는 1999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연합뉴스

무안군,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분배 소송 상고 포기

전남도청이 들어선 '남악신도시의 개발 이익금을 배분해 달라'는 소송과 관련,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무안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2년6개월간 갈등을 빚어온 무안군과 전남도·전남개발공사의 소송전은 마무리됐다.

지난 31일 법조계와 무안군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는 무안군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 이익금 분배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7월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 40%를 배분해 달라고 주장하며 전남도 등에 우선 15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무안군의 주장보다 도민이 낸 세금으로 생긴 이익금을 무안군만을 위해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남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안군은 지난 28일 지역민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1, 2심 판결이 명쾌해 대법원에 상고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세금 포탈'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집유 2년

장부 조작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5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청해진해운 법인과 김한식(74)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지난 31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운영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해진해운 법인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오하마나호의 매점 운영 수입·식권 판매 수입·카페 운영 수입·주류 판매 수입 중 일부를 빼돌려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하면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1년 3월24일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허위 내용의 장부를 근거로 청해진해운의 2010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등 2014년 4월까지 부가가치세 1억2584만여원과 법인세 2억287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앗車車…아버지 차 무면허 운전 10대 구급차 들이받아

쌍나팔

○…면허도 없이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던 10대가 운전미숙으로 119구급차를 들이받아 경찰서행.

○…3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6거리에서 조모(19)군이 운전하던 모닝 차량이 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를 추돌, 구급대원 노모(42)씨 등 3명이 다쳤다는 것.

○…이 사고로 이송 중이던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조군이 추돌한 구급차 탑승자가 응급환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1분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들이받았다면 어쨌겠느냐"고 혀를 끌끌.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5타경 15922	1	서구 상무버들로40번길14, 101동 6층 604호[유촌동,상무버들마을1주공아파트] 84.87㎡	아파트	219,600,000 219,600,000	
2015타경 16925	1	북구 일곡동 819-1 일곡3차현대아파트 302동 18층 1802호 84.985㎡	아파트	217,000,000 217,000,000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 16079	1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224 179㎡	전	1,754,200 1,754,2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현황일부도로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5타경 10200	1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81-55 632㎡	대	376,582,760 376,582,76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공장저당법제6조목록제19호별지와같음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 주1호 1층[소매점,세차장]184.82㎡ 2층[단독주택,기계실] 149.84㎡ 제시외 세차장 등 153.6㎡,기계기구 셀프세차기 1식	근린시설		
		동소 16 주2호 세차장64.98㎡[현황별실] 정비소,세차장 89㎡	근린시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자동차,중기]					
2015타경 14431	1	사용본거지:광주 광산구 월전로 68 [월전동] 등록번호:광주06다4690 기종:덤프트럭 연식:2007	자동차	60,000,000 60,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월전로68[유]대통운수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사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2. 16.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2. 23.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기준 법원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공개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방세, 기업부담은 손익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급등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입찰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와 기타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농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선순위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경매정보센터]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기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미리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2. 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원태